

〈서 평〉

Webster, Frank and Robbins, Kevin,
Information Technology: A Luddite Analysis,

1986, Ablex, N.J., 375 Pages.

바로 엿그제까지 경이롭게 보이던 기술이 아주 평범한 생활의 일부가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앞으로의 기술발달 전망은 더욱 눈부신 미래를 예견케 하면서 끊임없이 더 높은 수준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삶이 변화하는 폭과 깊이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엄청나게 확대되리라는 예측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가히 혁명적인 것이기에 그것을 농업혁명-산업혁명에 이은 제 3의 혁명 혹은 정보혁명으로 부르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과학·기술의 현란한 발달이 초래할 사회구조와 인간 삶의 변화의 구체적 모습은 어떠한가. 사회현상을 다루는 연구자는 물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焦眉의 관심과 의문을 제기하는 주제가 아닐 수 없다. 이 주제에 관한 논의에서도 낙관론과 비관론의 대립은 일견 첨예한 것으로 보인다. 기술발달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기회의 확대와 의사 결정의 분산가능성, 민주주의의 보편화, 이데올로기 갈등의 해소, 생산성 향상 및 절대적 부의 증가, 여가의 확대 등이 낙관론의 근거라면 비관론에서는 기술·정보혁명의 편중, 기존 착취구조의 강화, 고용격감, 소외확대 등을 주장한다.

지나친 단순화이긴 하지만 이렇게 구분해 놓고 보면 본서의 저자들은 제목이 암시하듯 비관론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이들은 산업혁명의 와중에서 진보의 거역자로 매도당한 러디즘(Luddism: 영국산업혁명초기의 소위 기계파괴운동에 내재된 노동계급의 집단적식: 評註)의 진정한 의미를 ‘강요된 변화에의 도전’으로 평가하고 이러한 러디즘의 관점을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이하 IT로 약칭)에 대해서도 적용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것

은 IT의 발달과 관련한 자유방임논리의 강요에 대한 반발이자 발전론적인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이라고 주장한다. 무엇보다도 기술을 ‘고유한 생명력을 갖고 인간을 자신(기술)의 논리에 종속시키는 독립적 존재’로 보는 논리, 즉 기술을 사회로부터 분리하여 별개로 취급하려는 시도를 배격하여, 오히려 기술은 특정한 사회관계의 반영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물론 이런 관점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실러(1984)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개발 사용에서 비롯된 이른바 통신혁명이라는 것이 세계적 파워체계에서 경제적 이익을 유지하려는 목적에 따른 결과임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저자들은 일부 비관론마저 비판한다. 비관론은 대개 신중론일 뿐이며 단기적으로 비관적이면서도, 장기적으로 IT의 수용이 불가피하고 거기에 인류발전의 관건이 내재하고 있다고 보는 기술결정론, 불가피론으로서 낙관론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들은 IT논의에 관한 한 서구의 리버럴리스트와 소비에트 사회주의의 입장이 놀랄만큼 일치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여기에도 결정론, 불가피론이 공유되고 있다는 것이다. 불가피론은 기술의 중립성과 결합하여 善用/誤用論이 되어 버린다. 즉 기술자체는 어떠한 가치도 갖고 있지 않으므로 그 효과는 사용자의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제대로 사용한다면 기술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IT에 관한 소비에트사회주의의 입장이 ‘다만 자본주의에서는 기술을 오용할 가능성이 상존하여 그에 따라 사회불안이 야기될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자본주의의 산물인 IT를 사회주의적 혁신·발전의 도구로 동원하려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

는 것이 이들의 소위 과학-기술혁명 논리라고 공박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산물인 IT는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유지하려는 속성이 있는데도 이러한 체제관련성을 무시한 선용/오용론은 ‘발전을 가져다 주는 기술’ 및 그 기술의 ‘관리’·‘계획’을 빙자한 새로운 지배관계의 정당화가 아니냐는 것이다. 저자들은 이런 논리의 밑바닥에는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의 전제조건이듯이 기술도 사회주의의 도구로 원용할 수 있다는 소위 과학적 맑시즘이 깔려있다고 보고 있다. 요컨대 IT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그 사상적 배경에 관계없이 대동소이한데 그것은 바로 IT를 만든 사회적 맥락을 무시했다는 점이다. 이런 비판이야말로 본서를 꿰뚫는 기본적 전제라 하겠다.

이러한 전제를 염두에 두고 이제 저자들이 IT의 낙관론을 비판하는 구체적 내용들을 살펴보자. 그것은 고용감소문제, 서비스/레저사회론, 기업자본과 국가, 서민의 장애등의 문제들이다.

IT의 도입에 따른 고용감소문제와 관련하여 이들이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낙관론이다.

노동이란 본래 그 자체로는 인간노력의 소비일 뿐이며 임금획득을 위한(즉, 노동과는 전혀 별개의 차원에서 영위되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에 불과하다. 또 노동의 욕구라는 것도 실은 조작된 것이어서 궁극적으로는 기술발달(및 그에 따른 부의 증대)에 의해 폐기 될 구시대적 윤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또 기술의 발달로 절대고용이 감소하더라도 부의 절대량 증가로 실업인구를 부양할 수 있다. 실업자들은 다만 구래(舊來)의 위장된 노동윤리, 즉 가상적 노동욕구를 미련없이 버리기만 하면 된다. 게다가 IT가 도입되면 서비스/레저부분의 고용이 늘어날테니 고용감소를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없는 것이다(특정 인용문이 아님: 評註).

저자들은 노동을 그 자체만 떼어 취급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며 작업현장을 넘어 넓은 사회관계로 연결되는 노동획득투쟁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 노동을 하는가(해야 하는가)’ 하는 사회상황에 대한 의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한 경제관계가 아니라 노동자의 종속을 강요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제외시키며 노동강도를 끊임 없이 높여가는 勞-

資간의 금전계약관계 속에서 노동의 진정한 사회적 의미를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의 사회적 맥락을 무시한 채 <노동행위/노동욕구>의 이원적 논리를 바탕으로 <IT발달→노동소멸→레저증대>의 도식을 주장하는 것은 오류라는 것이다. 그릇된 이원론(false dualism)에 대한 이 비판은 논리상 석연치 않은 구석이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노동이 사회관계의 표현임이 분명한 이상, 또한 그것이 단순히 임금의 댓가가 아닌 이상 노동의 소멸을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며 따라서 그것을 비판한 저자들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으로는 IT의 발달에 따라 고용수요가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하는 논제 자체에 관한 판단은 성급히 내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본다. 엄밀한 경험적 분석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한다. 예를 들어 저자들은 IT가 특히 사무관리부문 인력감소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고 서비스부문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경험적 자료를 인용하여 단정하고 있지만 산업부문별·직업별 영향에 관한 보다 심층적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만, 만약 IT가 고용을 격감시키고 그 감소가 낙관론자의 주장처럼 더 나은 사회복지수준을 향한 것이 아니라 기득권의 유지·강화를 위한 기도의 일환이라고 한다면 인간과 노동의 소외라는 측면에서 IT의 도입자체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탈속련화→노동가치의 지하·분절→노동통제의 고도화→전체사회의 통제로 확대>라는 메카니즘을 바탕으로 하는 소위 테일러리즘과 포디즘에 대한 비판적 분석은 그것이 IT도입과 포리의 관계라는 점에서 상당한 통찰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IT→풍요→레저(자유)>의 논리에 입각한 레저사회론의 주장처럼 1차·2차 생산(Base)의 확대를 통해 레저(Super Structure)를 즐길 여유가 생산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를 분리 가능한 구조로 보는 데서 비롯된 오류임을 비판하고(Base로서의 서비스제품(Service Product)이 오히려 서비스부문 노동자를 축출하는 경우처럼), 레저나 서비스부문은 IT발달로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IT를 매개로 하는 자본

(기업)의 주요 공략대상이라고 하는 저자들의 비판은 혹독하기까지 하다. 그것은 IT산업의 주된 수혜자가 대기업(특히 다국적 기업)이며 이들은 IT를 바탕으로 모든 세대·개인의 의사결정영역에까지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이미 강력하고 부유한 계층의 지배·질서구조를 영속화하는데 앞장서고 있고 이들 다국적기업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적 존재인 국가마저 이들의 역할과 운용에 깊게 개입되어 있다는 지적으로도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IT시대의 자본-국가 관계는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주제이다. 자본주의 국가는 공공재의 공급, 노동자의 보호, 국유화 등의 부분에서 자본(기업)과 상충할 소지가 있으나 본질적으로 국가자신의 토대가 되는 자본주의 곧 시장경제 체제를 깨려하진 않기 때문에 양자는 야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여기에서 IT의 영향과 관련하여 분산, 가족단위의 원자화(Privatization) 혹은 탈대중화(demassification)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IT 낙관론자들은 IT가 일반적으로 분산을 선호(혹은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나 저자들은 그러한 분산은 IT의 원격통제능력을 전제로 한 '집중부문내의 분산'일 뿐으로, 다만 집중과 분산을 대조시킴으로서, 표방된 분산이 사실은 집중을 은폐하는데 불과하다는 집중-분산의 동반 원리를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어찌 보면 <IT→집중? 또는 분산?> 자체가 무의미한 논란일 수 있다고 보면서도 저자들의 입장은 <IT→집중강화>쪽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다. 이 주제는 특히 지리학에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설명이 나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된다. 원자화(私營化)·탈대중화는 분산의 문제와 직

결되어 있다. 이것은 얼핏 민주화·자유화를 연상하게도 하나, 사실은 그것이 공공부문 내지 공공적 일체감의 퇴조와 상업주의·소비주의(소비자자본주의)·공기업의 사유화 등과 같은, 테일러리즘-포디즘이 추구한 <소비부문의 장악→사회통제>의 숨은 논리의 표출로서 '지불 능력이 있는 한도 내에서의 자유'에 불과한 것임을 저자들은 깨우쳐 주고 있다. 심지어 가장 공공성을 견지해야 할 지식조차 상업화·개인화의 주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서에서 아쉬움을 느낀다면 분석 대상이 선진자본주의 국가에 한정되어 IT가 발달할 수록 더욱 취약한 처지가 되기 쉬운 저개발국에 대한 언급이 없고(이 점에서 IT의 사회적 맥락을 강조한 저자들이 말하는 사회란 것이 서구사회를 일반화한 개념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따라서 IT가 앞으로 세계정치·경제구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 분석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 제목에서 암시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강도의 실천적인 무엇을 기대한 사람들에게는 다소 실망을 주는 선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같은 논지가 자주 반복되고 그것이 산만한 소제목들 속에 어지럽게 널려 있어 다소 지리한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아쉬움들이 본서의 본질적 가치를 위협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 논문이 아닌 단행본으로서 이 분야의 비판적 관점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엮어 체계화한 공로는 후속 연구의 귀중한 안내자로서 높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李 宗 哲 (外大講師)